

지산주택조합, 사기분양 알고도 방치했다

광주동부경찰, 업무대행사 다중계약사기 방관 조합장 영장 신청 조합장 사의 표명·담보 대출 상환 어려워 조합 운영 파행 불가피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조합장이 올해 불거진 조합 업무대행사의 사기분양 사실을 지난해부터 알고도 방치했던 것(광주일보 6월 29일 7면)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장, 조합원 대출 상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 책임자 및 조합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면서 조합 운영에도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조합장 보유 아파트가 업무대행사를 통해 비싸게 처분한 혐의를 잡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중복 분양 알고도 방치해 피해 키위”=광주동부경찰은 23일 업무대행사의 다중계약 사기를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산주택조합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업무대행사 관리자 3명 등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합장 측이 지난해 11월, 업무대행사의 다중계약사기를 파악했고 12월 말까지 정상화를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각서’를 업무대행사에게 받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업무대행사 분양팀 직원들 3명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조합장이 보유한 아파트를 업무대행사에게 비싼 가격

으로 처분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중”이라며 “조합장은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기분양 여부를 알고도 해결할 시간을 주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업무대행사 분양팀 관리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합장과 나머지 1명의 분양팀 직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조합장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방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조합 운영 파행 불가피=법원이 기각하긴 했지만 경찰이 조합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조합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측은 현 조합장이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달 1일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조합장 등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건축 사업조차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11월에 조합원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은 브릿지대출(단기차입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 160여억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제때 상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광주동경찰은 지산주택조합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해 조합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125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다른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왜곡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안된다”

5월단체들 ‘군사정부 511연구위 활동’ 임명 반대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거론되면서 5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은 23일 성명을 내고 서 전 차관의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 전 차관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은폐한 비민주적인 511 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현재까지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부인해왔다”면서 “서 전 차관을 권력의 증거에

임명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의 심각한 장애”라고 비판했다. 511 연구위원회는 1988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광주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가 비밀리에 운영했던 조직으로, 당시 활동 내용과 과정 등은 밝혀져야 할 과제다.

5월 단체 반발이 거세지면서 서 전 차관은 24일 광주를 방문, 5월 3단체(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장과 간담회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안 가져도·영광 송이도 예인선 침몰 기름 유출

양식 어민들 “전복·해삼 양식장 오염될라” 전전긍긍



신안 흑산도와 영광 송이도 일대 어민들이 초긴장 상태다.

23일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져도항에서 78t급 부산선적 예인선 A호가 1036t급 철부선과 충돌, 침몰하면서 선내에 적재된 병커 A유 23t이 바다로 유출됐다.

〈사진〉 가져도 주민들은 자칫 항 일대 바다가 오염되면서 그동안 채취했던 전복·해삼·돔 수확이 어렵게됐다고 허탈해하고 있다.

조은찬(67) 가져도 어촌계장은 “가제도에서는 연간 5t 가량의 자연산 해삼이 수확되는데, 앞으로 5년 간은 수확이 어려

울 것 같다”며 “줄돔, 돌돔 등도 서식지가 다른 곳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돼, 낚시객들의 발길도 끊길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영광 송이도 주민들도 전복된 예인선에서 유출된 기름이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커 노심초사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영광군 송이도 동쪽 해상에서 목포선적 50t급 예인선 B호(승선원 2명)가 전복된 데 따라 승선원 구조 작업 및 유출된 경우(13t) 방제 작업에 들어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돈이 아니라 아버지 한 풀어주는게 평생 소원”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유족들 미쓰비시 소송대리인 참여 첫 재판

“부모님 한(恨)을 풀어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법정에서 선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이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담은 글을 읽어내려갔다.

유족들은 “아버지는 징용에 다녀와서 몸이 망가지고 병들었으며 후유증으로 늘 병석에 누워계셨고 변변한 직장도 갖지 못했다. 병약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을 둔 가족들은 가난과 배고픔에 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무능한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한을 풀어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측이 소송이 제기된 지 15개월만에 소송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근로청산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와 김정호 변호사는 23일 광주지법 앞에서 “유족들은 부모님의 한을 풀고싶을 뿐”이라며 “더 이상 소송이 늦춰지지 않고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모임 제공〉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본격화됐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이기리)는 23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재판에는 미쓰비시 측 법률대리인 김용출 변호사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국제송달로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일본 기업에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자 공식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소재지를 알 수 없

을 때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될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원은 원고 주장과 증거만 검토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소송 대리인이 없더라도 원고측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불이익을 우려한 미쓰비시측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희 지부장은 미쓰비시 측이 보유한 후생 연금 기록을 제출하도록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에 있는 피징용자 명부에 대한 사실조치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쓰비시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용출 변호사는 불법행위 증거가 없고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으며 청구권 소멸 시효도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음재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담양 출신 양부남 부산고검장 사의 표명

담양 출신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로, 지역 출신 최고위급 검찰 인사라는 점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인급됐던 인물이다. 23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양고검장과 김영대(57·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도 사의를 표명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고검장은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은 양고검장은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했다. 김양군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전남대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검사장에 이어 광주지검장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강원랜드 채유비리 등 특별수사단’ 단장을 거치며 수사과정에서 검찰총

장 등 지휘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27~30기를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음주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다음달 초에는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전담예총 회장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단독 김재항 부장판사는 2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모 전담예총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난영은 자살했다’는 제목의 르포와 동일한 내용을 ‘슬픈 목소리만큼이나 처연한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해 신문에 게재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지적재산

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목포·신안예총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윤재결 기자가 1983년 월간 ‘여성중앙’ 등에 실은 ‘목포의 눈물’ 가수 이난영의 르포 기사를 2013년 5월 24일부터 그해 10월 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목포시민신문에 무단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